도내 민주당 소속 총선 출마 예정자들 ·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시민공천배심원 경선하자”

“동원 경선 · 밀실공천 오명 벗을 수 있어… 경쟁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내년 22대 총선에 나서는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출마 일부예정자들과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선출에 전북지역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으로 총선에 나서는 두세훈 · 박진만 · 성기청 · 성준후 · 유재석 · 이덕춘 · 이희성 · 최형재 예비후보(혹은 예정자)가 함께 자리했다.

이들의 주장 이유는 지난 7일 당 2차 중앙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출직공직자 평가 하위 10% 경선 감산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통과됐지만 민심에 부응할만한 획기적인 혁신으로 보기 힘들어 여전히 전북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치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과감한 정치혁신의 실험무대가 되어서 꺼져가는 정치혁신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앞장 설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는 후보선출경선과정에서 공정하게 모집된 배심원들이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며, 일방적인 선택만을 요구하는 여론조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동원경선이나 밀실공천의 오명을 벗을 수 있고 보다 나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강충상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과 참석자들은 “민주당 당헌 98조에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정치적 결단을 통해 꺼져가는 정치혁신의 불씨를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서 먼저 살리자”고 강조하며 “이번 총선승리를 통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민주당의 네 번째 집권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뉴시스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총선에 나서는 민주당 소속 두세훈 · 박진만 · 성기청 · 성준후 · 유재석 · 이덕춘 · 이희성 · 최형재 예비후보(예정자)와 강충상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이 전북지역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제안하고 있다.

“금태섭 - 양향자 연대 검토”

이낙연 전 총리, 제3지대 빅텐트 구축 나서

“지금 국가 위기에 대한 생각 같이하고 있어”

민주 탈당한 이상민, 이낙연 신당 합류 가능성

당내서는 비판 목소리… 친명계 의원들 ‘격앙’

내년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금태섭 · 양향자 신당과의 연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당내 비명마저 성급한 신당 추진에 반대하자 외부 세력과의 연대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 전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지지 세력이 미약해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태섭 · 양향자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만나서 각각 창당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힘내시라고 격려했다”며 “그리고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여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정책이나 비전에 공통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국가 위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다음에 정치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큰 줄거리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조국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을 떠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이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총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치의 일그러진 모습, 퇴행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며 “여러가지 해법들에 대해 말씀을 좀 많이 나누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이 전 총리를 만나 신당 창당을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전 총리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독주정권에 투쟁해야 미래가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전 총리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명(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도 신당 창당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숨 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 막 100미터(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다른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 “저희랑 무관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왜 저렇게 서두르지”라고 말했다.

/뉴시스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연구회 세종시 지능형도시 벤치마킹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연구회(대표의원 김희수)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세종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해 선진지 벤치마킹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연구회의 이번 벤치마킹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도내 사례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세종도시통합정보센터의 관제상황실을 살펴보고 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김희수 의원은 “세종도시통합정보센터는 방범과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환경 감시 시스템 등 다양한 관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시스템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방범, 교통, 시설물 등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통합적인 도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설립됐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탄소중립 교육과정 운영 제도화

도의회, 한정수 도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전국 최초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제도화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4 ·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탄소중립 교육과정(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전환 과정에서 경제 · 산업 · 사회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위한 지식 함양이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 · 학습에 관한 계획과 방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연계해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 확대,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정수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는 미래세대이자 주체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생태전환 등 환경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유아 무상보육 실현 보육사업 발전 공로 인정

이병철 도의원, 전북 어린이집연합회 감사패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이 전국 최초의 유아 무상보육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은옥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장과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은 13일 전라북도의회를 찾아 ‘전국 최초 유아 무상보육 실현’에 앞장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이병철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영유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고, 도민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전북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오은미 도의원 발의… 농민 부담 최소화 제도적 장치 마련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 · 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의 필수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지원 품목, 지원액 · 지원한도를 비롯해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업소득 천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농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첫 단추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